野, 미르·K재단 집중포화…이승철 "답변 못해" 모르쇠 일관

<전경련 부회장>

국감초점-기획재정위·안전행정위

"향후 5년간 모금 계획"
새누리는 방어에 급급
자유총연맹 횡령 비리 질타

국회는 12일 기획재정위와 안전행정위 등 5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이날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논란이 또다시 쟁점이 됐고 자유총연맹에 대한 국고보조지원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획재정위**=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에게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이 기재부 등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근거로 두 재단이 향후 5년간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 등을 걷으려 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결국 대기업들의 회원제 클럽을 하겠다는 것이냐. 완전히 '부패클럽'이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경련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법원 등 국가기관을 모두 동원해 정치적으로 한꺼번에 움직일 기관이라고는 청와대밖에 없지 않으냐"고 추궁했다.

이처럼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이 부회장은 대부분의 의원 질문에 "검찰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고만답했다.

이에 이 부회장의 답변 태도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처럼 이날 국감이 미르·K스포츠 재단 논란 중심으로만 흐르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방어에 나서면서 여야가 부딪히기도 했다.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은 "오늘은 기재부 조세정책에 관련한 국감을 하는 날"이라면서 "우리 국감이 괜히 폭로전이나 하는 그런 장소가 돼서는 안 되고 주제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행정위**=이날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는 연간 1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유총연맹에 대한 추궁이 집중됐다.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은 질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고보조금 횡령 비리가 끊이지 않는 자유총연맹의 회계 문제를 따졌다. 박 의원은 "행자부에서 연례감사를 통해 ▲회계보고 증빙서류 미첨부 ▲비목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 ▲예산 집행과 통장 내역의 불일치 등의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민주 백재현 의원도 "19대 국회 때 살펴보면 별도법인을 통한 편법적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 공금횡령 수사, 청와대 인사 개입, 훈포상자 선정 비리 등 유독 자유총연맹을 둘러싼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다"며 "특히 자유총연맹이 대주주로 있는 한전산업개발 산하 5개 발전사에서 발생한 부당이득 401억원의 상당부분이 자유총연맹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비영리 민간단체 선정 기준과 평가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제대로 답변 하세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근부회장(오른쪽)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野 우병우·최순실·차은택 국감 출석 압박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12일 야당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감 증인출석에 대한 청와대의 부정적인 입장이 모순된다며 우 수석의 운영위 국감 증인 출석을 거듭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가 민정수석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불출석의 이유로 들었는데, 이미 청와대가 깬 관례"라면서 "청와대는 지난해 정윤회 문건 파문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수석이 사표를 제출하며 출석을 거부하자 청와대는 이를 맹비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국감 최대쟁점인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의 규명을 위한 증인채택 문제에도 화력을 집중시켰다.

현 정권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의 증인채택에 여당이 강력히 반대하자 막판 총공세를 펴는 것이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국감 파업이 무더기 증인채택 거부와 도를 넘은 색깔론으로 이어지는 등 혼용무도(昏庸無道·군주가 어리석어 나라의 도가 서지 않는다는 뜻)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미르·K스포츠 등은 신이 내린 재단이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신을 보호하려 한다"면서 "우리는 꼭 그 신을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야당과 함께 공조해 철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더민주-국민의당 호남당원 확보 경쟁

더민주 탈당 당원 복당 추진
국민의당 연내 두배 늘리기

호남 민심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전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번에는 호남 당원 확보를 놓고 일전을 벌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체제 전환을 앞두고 조직을 정비하면서 탈당 당원들의 복당 등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오는 12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막바지 당원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더민주는 전국 시·도당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분당 사태와 4·13 총선을 거치면서 탈당한 당원들의 현황 파악에 나섰다. "집 나간 당원들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공언한 추미애 대표의 통합 행보의 일환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직 정비와 함께 지지자들을 최대한 끌어 모으겠다는 것이다. 특히, 호남지역에서 탈당한 당원들이 돌아온다면 국민의당과의 호남 주도권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복당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당원자격심사위 심사를 거쳐 당무위가 의결할 경우에는 복당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마련돼 있다.

실제로 지난 총선 당시 탈당했던 이해찬 전 총리와 이 전 총리를 선거에서 도왔다는 이유로 제명된 당원 15명은 지난달 30일 당무위를 거쳐 일괄 복당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분당 과정에서 탈당자가 속출했던 호남에서의 복당 규모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더민주 호남지역 당원은 권리당원 8만여명을 포함, 100만 명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도 당세 확장과 12월 말 성공적인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당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당원 규모는 11만7000명 정도지만 연말까지 20만 명을 넘어서는 당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당직 선거에서의 '전당원 투표제' 도입으로 당원 가입 흐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며 연말까지 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호남에서는 '10만 당원론'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6만 명 수준이지만 당 대표를 놓고 호남 주자들이 나선다면 '입당 러시' 등으로 호남지역 당원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구축할 10만 호남 당원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내용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민주 광주시당(위원장 이형석)은 12일 제2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전국 17개 시·도당 중 처음으로 여성·노인·청년위원장 등 전국위원회급 상설위원장 7명을 상무위원 투표로 선출하는 등 시당 조직 정비를 완료했다.

광주시당은 이날 상무위원 직접투표로 청년위원장에 이경호 북구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을, 여성위원장에 정순애 서구의회 의원을, 노인위원장에 오향섭 서구갑 지역위원회 고문을, 대학생위원장에 김솔빈 조선대 총학생회장을 뽑았다.

또 장애인위원장에 서미정 광주시의원을, 노동위원장에는 문현식 코카콜라음료 노조위원장을, 농어민위원장에 이명재 동남을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등을 선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함정 침몰 계기 해경 부활 목소리

해양경찰청 부활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함정을 침몰시킨 사건이 계기가 됐다.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로 해체돼 국민안전처 소속의 일개 조직으로 격하되면서 해경의 해양 경비역량이 크게 저하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 "삼면이 바다고 해양국가가 돼야 할 상황에서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해양경찰청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안전처 산하로 갔을 때는 과거 잘못됐던 해경이 강인하게 재탄생해야 했는데, 안전처로 간 다음에 더 무기력해졌다"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 침범 문제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 만큼 이런 조직을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해경 함정 침몰 원인에 대해 "해경(청)을 해체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해경청 부활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